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와 미일관계*

강 근 형**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정치의 구조 변화와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모색
- III.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내용: 국제적 역할 증대
 1. 안보면의 역할 증대
 2. 외교면의 역할 증대
 3. 경제협력면의 역할 증대
- IV.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미일관계
- V. 결 론

I. 서 론

일본은 2차대전 이후 40년 동안 미국의 안전보장 하에서 국민총생산(GNP)의 1% 미만만을 방위비에 투자하고, 여력의 자원을 경제성장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최대의 채권국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엔블록(Yen block)을 형성할 정도로 그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의 금액도 이제는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제1의 원조국이 되었다.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세계 최대 해외 원조국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00년 한 해의 정부개발원조만도 130억 달러를 썼다. 95억 달러를 원조한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막대한 원조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를 높여오고 있음을 물론 막강한 경제력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2년에 일본은 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을 통과시켜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에도 일본의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는 즉각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할 것을 표명하고, 자위대의 파병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한편, 구소련의 변화로 말미암은 냉전의 종식은 국제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의 큰 사안이었으며, 이로써 일본이 처하고 있는 국제환경도 대폭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외교정책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경제력의 상승에 따른 힘의 확대와 냉전 종식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정치의 구조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

* 이 논문은 1998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국외파견 연구지원계획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요인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과거의 대세순응적인 소극적인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국가간의 힘의 배분에 따라 형성되는 국제정치의 구조가 개별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한다"는 신현실주의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려는 일본 국내의 정치엘리트들의 인식 변화도 일본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를 설명·예측해 보려 한다.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과 함께 일본의 외교정책도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국제적 역할 증대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와 세계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역할 재조정은 기존의 후견인인 미국은 물론 동아시아국가들과의 마찰도 노정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첫째 냉전 종식이후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외교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려 한다. 둘째,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의 선회가 미국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설명·예측해보려 한다. 셋째, 이와 같이 일본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국제정치의 구조 변화와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모색

1980년대 후반 구소련과 동구권의 변화로 시작된 냉전체제의 종식은 국제정치의 구조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국제정치의 구조란 강대국간의 힘의 배분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바, 신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구조가 개별국가들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¹⁾ 초강대국의 경우에는 자신이 구조를 결정하는 하나의 극(Pole)을 형성하게 되므로 구조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중간국(Middle power)이나 약소국의 경우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구조의 영향력은 결정적이다.

냉전기에 있어 국제정치의 구조는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이 세계질서를 양분하고 있는 양극구조였다. 미국을 극국가(極國家)로 하는 서구진영과 소련을 극국가(極國家)로 하는 동구진영간의 힘의 대결 구도가 형성, 유지되었다. 양극구조 하에서는 두 개의 초강대국인 극 국가만이 외교적 자주권을 행사하고, 다른 나라들은 극 국가에 종속되어 제한된 주권밖에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도 이러한 냉전기의 양극구조하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의 충실한 일원으로서 후견국가인 미국의 대외 정책에 편승하여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알려진 냉전기의 일본의 외교정책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미국에 맡기고, 최소한의 경비(GNP의 1% 이내)만을 방위비에 쓰면서 그 여력을 경제부흥과 발전에 투자하였다. '요시다 독트린'은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초를 형성하고, 경제우선정책의 근간이 된다. 이는 미군 점

1)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 79-101 참조.

령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가 일본의 경제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국력을 경제발전 전에 집중시키는 '경제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 친미노선을 추구한 것을 말한다. 이의 핵심은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일본 내에 미군사기지의 설치 및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여 일본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하여 일본의 재무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론분열을 회피하며, 일본은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우선정책과 미국에의 안보 의존은 '요시다 독트린'의 두가지 원칙이며, 이는 일본 자민당내 보수 연합의 정당성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요시다의 노선은 일본의 보수본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요시다 스쿨'이라 불리는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계속 유지되면서,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의 근간이 되어 왔다.²⁾

구소련권의 변화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식은 국제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바, 그것은 군사면에서는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일본, 유럽, 중국 등의 경제대국화로 인해 다극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이를 '일-다극구조(Uni-multipolarity)'³⁾라고 칭하고 있다.

탈냉전기의 세계에는 하나의 초강대국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가 일극지배체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극지배체제 하에서는 하나의 초강대국이 존재하고 주요한 대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수의 소국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초강대국은 주요한 국제문제를 단독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외의 나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힘을 합하여 초강대국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로마시대의 수세기 동안과 중국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시대는 일극체제에 가까웠다. 한편, 냉전시대와 같은 양극체제의 경우에는 두 개의 초강대국이 존재하고, 그 초강대국간의 관계가 국제정치의 축이 된다. 초강대국은 각각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를 지배하고 그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또한 다극체제의 경우는 다수의 대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세계의 정치, 경제 흐름에 따라서 협조하거나 아니면 경쟁을 한다. 이 경우 중요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국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⁴⁾ 19세기까지의 유럽에서 전개되었던 웨스트팔리아체제는 이러한 다극체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가 주권국가의 독립성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칙하에서 유지되는 국가들의 사회(Society of states)라는 점에서는 웨스트팔리아체제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과거에는 구성원들이 동질적이고 힘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오늘날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5-6개의

2) 무라마츠와 크라우스는 '요시다 독트린'이 보수본류의 정치적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Michio Muramatsu and Ellis S. Krauss. "The Conservative Policy Line and the Development of Patterned Pluralism." Kozo Yamamura and Yasukichi Yasuba(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The Domestic Transformatio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516-554 참조.

3)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Survival*, Vol. 33, No.1 (January/February 1991), pp. 3-17 ;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The New Dimension of 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1999), pp. 35-50 참조.

조셉 나이도 단 하나의 위계구조로 다층적 구조를 가진 세계정치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상의 군사적 층에서는 미국에 비견할만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극구조(unipolar)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중간층은 지난 20년 동안 삼극구조였으며, 초극적 상호의존의 최저층은 힘의 분산구조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Joseph S. Nye,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p. 88.

4) 새뮤얼 헌팅턴, 소순창·김찬동 옮김,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서울: 김영사, 2001), pp. 55-56 ;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지역대국, 그리고 수많은 비동질적인 약소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초강대국과 몇 개의 대국으로 구성되는 일-다극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해도 국제문제를 자신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강대국과 여러 대국들간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하나의 초강대국은 여러 대국이 연합하여 중요한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한다면, 지역 대국들은 과거 냉전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일-다극구조 하에서 외교정책의 자율성이 오히려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탈냉전기의 일-다극구조 하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외교정책면에서 초강대국의 패권적 힘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세력간의 합의의 기반 위에서 미국의 힘을 행사하는 이른바 합의적인 지도력을 추구해왔으며, 일본과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이를 통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유엔 중심의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해 나가려 했던 것이다. 부시 행정부도 9·11테러 이후 유럽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지역대국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테러전쟁을 수행한 것을 보면, 힘의 우위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⁵⁾

초강대국은 특정 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도전가능성이 높은 대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즉, 동아시아에 있어 초강대국인 미국은 지역대국인 일본과의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어느 정도 지원함으로써 도전가능성이 높은 지역대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역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는 탈냉전기의 일-다극구조하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일본의 경제대국화로의 부상은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대국화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인 외교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의 정책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적 자신감이 한층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5년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22 달러였다. 이것은 당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2,443 달러의 9.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도 성장과정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1970년에는 미국의 16%에 달하는 1,584 달러가 되었으며, 1991년에는 미국을 능가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26,889 달러에 달하였다. 1999년의 1인당 GDP 규모도 미국의 34,047달러를 앞질러서 일본은 34,359달러를 차지하였다.⁶⁾ 이러한 고도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가는 일본의 경제력을 크게 확대시켜 왔다. 1955년 당시 일본의 GDP 총액은 240억 달러로서 미국의 6.0%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1970년에는 미국의 20.0%에 해당하는 1,965억 달러, 그리고 1991년에는 미국의 59%에 해당하는 33,37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력의 확대 과정에서 세계의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1960년 3.0%에서 70년 8.0%, 80년 10.6%를 거쳐 1990년에는 15.3%로 확대되었다. 1991년에 일본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서, 가장 큰 10대 은행과 25개의 가장 큰 세계기업 중 15개를 소유했으며, 1990년대 초에 순수 해외

5)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강근형,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신아세아』, 제8권, 제4호 (2001년 겨울), pp. 210-238 참조.

6) 日本銀行, 『國際比較統計 2000』, The Asahi Shimbun, Japan Almanac 2002 (東京: 朝日新聞社, 2001), p. 25에서 인용.

자산이 3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1999년의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7,439억 달러인데 비해 미국은 -14,737억 달러, 독일 1,050억 달러, 영국 -2,397억 달러에 달하여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9년에 세계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14.4%인데, 미국 30.3%, 독일 7.0%, 프랑스, 4.7%, 영국 4.8%였다.⁷⁾

또한 무역수지면에서도 일본은 1998년의 경우 5,065억 달러, 99년 4,755억 달러, 2000년 5,16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미국은 98년 2,449억 달러, 99년 3,44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도 1999년말 기준 일본은 2,880.80억 달러로 미국의 730.69억 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 국가이다.⁸⁾ 현재 일본이 처하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외환보유고나 대외채권액 면에서는 어느 국가보다 견실하며, 이 점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임에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정치의 구조의 변화와 일본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은 일본의 정책적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구소련을 가상적으로 새웠던 냉전기의 외교정책만을 고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정치엘리트들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그것은 오늘날 일본의 보수적인 지도층을 주도하고 있는 '신보수주의' 세력의 부상과 관련이 깊다. 신보수주의는 기존의 보수지향적인 맥락에서 정치적·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민족주의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려는 1970년대 말부터 비롯된 새로운 사조이다. 오오다케 히데오(大嶽秀夫)는 신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 대외적 전통주의(민족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로 보았으며, 여기에 나카소네의 일본의 국제화 국가의 의지를 추가시켰다.⁹⁾ 이러한 신사조 형성에는 나카소네(中曾根)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신보수주의가 일본의 지배적 사조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82년 11월 나카소네 내각의 성립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안으로는 보수화, 밖으로는 대국화를 지향하는 나카소네의 주장에서 신보수주의 사상의 전형을 볼 수 있다. '부국'을 위해 '강병'을 뒤로 미룸으로써 요시다 노선이 이룩한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발판으로 그는 대국화 노선을 천명하면서 기존노선의 궤도수정 내지 방향전환을 요구했던 것이다.¹⁰⁾ 나카소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외쳤으며, 이를 통하여 전후 패배의식에서 탈피,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일본국가를 만들려 했다. 자민당 장기집권의 계기가 되어 왔던 '55년체제'¹¹⁾를 붕괴시킨 일본의 정치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며, 전쟁

7) *Ibid.*, p. 28, 80.

8) *Ibid.*, pp. 112-113.

9) 大嶽秀夫, "中曾根政治のイデオロギ-とその國內政治的背景," 『レウエイアサン: 特輯: 新保守主義の擡頭』, 1號 (1987 秋), pp. 73-91.

10) 車基壁, "21世紀 日本의 位相--政治理念--," 現代日本研究會 編, 『21世紀日本의 位相』, (서울: 法文社, 1993), p. 44.

11) '55년 체제'란 1955년에 좌우 양파로 나뉘었던 일본 사회당이 통일되고, 이것에 대항하여 보수계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합동이 실현됨으로써 자유민주당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상반되는 두개 정당이 대립하는 체제를 '55년 체제'라 하며, '55년 체제'하에서 자민당의 일당지배가 38년간 계속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갑윤, "일본의 정당과 선거," 최상용 외, 『일본·일본학: 현대 일본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오름, 1994), pp. 37-70 참조.

과 패전의 경험이 없는 비교적 젊은 세대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신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다. 이들 보수세력은 냉전구조의 종식과 함께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이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일본 국익을 새롭게 해석하며, 국내 정치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로부터 경제력에 의한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역할의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책임도 요구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인 오자와 이치로는 '보통국가론'(Normal power)을 주장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상업을 중시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만을 중시하는 비정상적 국가였으나, 이제부터는 경제적 공헌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의 역할도 국제관계에서 수행하는 정상적인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일본이 국내의 경제적인 발전과 부의 분배에만 치중해 왔던 '片肺國家'로부터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버젓한 '普通國家'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국가'가 되어 국제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¹²⁾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국기·국가법제정, 야스쿠니신사의 국립묘지화 논의, 군사력 강화,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조사회의 설치 등 정치사회의 보수화 경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논란 속에서 강행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이러한 보수화의 경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일동맹관계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 제정, 미국과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연구개발 참여의 결정, 정찰위성 도입 및 유사법제 논의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모색도 이러한 보수화의 경향과 관련이 깊다 하겠다.¹³⁾ 더욱이 90년대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불황,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개발 시도 등이 일본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보수적인 민족주의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국민들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은 국내정치적으로도 사민당 등 진보야당들의 몰락을 초래하였다.¹⁴⁾ 자민당이 보수당, 공명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민주당의 보수세력과 함께 보수대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들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법제화에 쉽게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 즉 '강한 국가 일본'을 지향하는 국제적 역할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Ⅲ.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내용: 국제적 역할 증대

상기한 배경 하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역할 증대는 크게 안보면, 외교면, 경제협력면 등 세가지 측면에서 노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해 보려 한다.

12)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 pp. 102-105, 123-124.

13) 김성철, "일본의 보통국가와 적극적 외교," 김성철 편, 『일본의 외교정책』(성남: 세종연구소, 2000), p. 10.

14) 2000년 중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자민당 233석, 공명당 31석, 보수당 7석, 민주당 127석, 자유당 22석, 사민당 19석, 공산당 20석, 무소속 15석을 차지하여 진보야당의 참패가 두드러진다.

1. 안보면의 역할 증대

첫째, 일본의 안보면의 역할 증대를 목표로 한 방위정책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전후부터 70년대까지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전수방위전략'이 그 근간이 되어 왔다.¹⁵⁾ 이것은 상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것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한되며 또 보유하는 군사력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변화하게 된다. 스즈키(鈴木) 수상은 1981년 종전의 200해리(본토서남) 해상방위에서 탈피하여 '1000해리 해상수송로(sea lanes)방위'전략에서 '지역방위'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¹⁶⁾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정책은 종합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원유시장의 확보라는 사활이 걸린 정책이며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

1985년 나카소네 내각이 채택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1990)은 일본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서, 장비나 무기는 군수방위용을 넘어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이 계획의 총경비는 18조 4천억엔으로 이 기간중(1987) 방위비가 GNP 1% 한도를 초과하였다.¹⁷⁾ 1991년 3월 이러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끝낼 당시 일본은 60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어 미 제7함대의 3배나 되었고, 대잠초계기는 100대로서 7함대의 5배에 달하고 유럽의 NATO국가가 보유하는 것의 2배가 된다. 또한 F-15와 F-4 등 최선에 전투기는 320기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이 본토 방위용으로 가지고 있는 300기보다 더 많은 수이다.¹⁸⁾

1999년도 일본의 군사비는 408억 달러이며, 미국의 2,755억 달러, 러시아 560억 달러 다음으로 세계 제3위의 군사비를 지출했다.¹⁹⁾ 병력 규모는 정원 27만 명으로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나, 하사관 이상의 간부가 65.15%를 차지하는 특이한 구성으로 유사시 사병을 충원하면 1, 2개월 이내에 100만 명으로 될 수 있는 규모이다.²⁰⁾

더욱이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무기의 성능은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의 범위 내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1994년 2월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사회당의 동의를 얻어 早期警戒管制機(AWACS) 두 대의 구입 경비를 승인한 바 있다.²¹⁾ 이 AWACS는 한 대에 약 550억엔으로 두 배분이라면 약 1천 100억엔에 이른다. AWACS의 항속거리는 9,260km이다. 일본의 한쪽 끝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열도(2,000km)를 거쳐 약 7,200km 밖까지 이르는 성능을 자랑한다. 물론 이 성능은 1,000해리 해상수송로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이지스(AEGIS)함(7,250톤)이나 공중급유기,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체제도 결코 전수방위의 틀 안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6월 북한의 '로동 1호' 시험 발사 사실이 알려지자, 96년부터 시작되는 중장기방위력정비계획에 TMD체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

15) 자세한 분석은 강근형, "일본의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Ⅱ』(서울: 오름, 1998), pp. 693-703 참조.

16) Reinhard Drift, *Japan's Foreign Policy*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0), p. 39.

17) *Ibid.*, pp. 34-35.

18) 오기평, "신국제질서와 일본의 역할," 『일본평론』 7집 (1993년 봄/여름), p. 74.

19) IISS, *Military Balance 2000/0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에서 인용.

20) 이상우, "21세기 신아시아 질서와 일본의 역할,"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Ⅱ』(서울: 오름, 1998), p. 656.

21) 日本 防衛廳編, 『防衛白書』, 平成6年版(1994), pp. 37-38참조.

며, 98년 12월 미국과의 TMD 공동개발연구가 착수되었고, 정보수입위성의 보유계획이 결정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TMD체제가 완성되면 사실상 일본은 동북아 일대에서 확고한 군사적 지배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은 항공관제능력과 수색능력은 동북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한다. 동북아에서 가장 많은 14대의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막강한 지상레이더망을 이용하여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F-15를 운용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의 하나이고 자국이 생산하는 F-2도 보유하고 있다.²²⁾

이와 같이 AWACS와 장거리대형수송기 등 장거리 투사능력(Power Projection)의 강화와 더불어 93년부터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4척을 취역시킨 바 있는 1척당 1,200억 엔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5년)에서 5척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원만한 작전수행을 위해 항속거리 5,000km이상의 장거리수송기를 국산화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작선 침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3년까지 고속미사일함 6척을 동해 쪽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²³⁾

특히, 오늘날 민간기술과 군사기술간에 구별이 별로 없는 범용기술(Dual technology)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첨단 민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이 기술들을 군사부문에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을 외형의 장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민간부문에서도 세계 정상급인 조선기술로 최선에 구축함과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만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 역시 선체부분은 일본이 건조할 정도로 조선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다.²⁴⁾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뒤떨어졌지만, 부단한 국산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왔는 바, 미쓰비시중공업에 의해 차세대지원전투기(Fighter Support Experiment, FSX)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 했다. 이 전투기의 설계를 본 미국이 공동개발을 요구하여 1988년 11월에 미일간의 FSX 공동개발의 정부간 조인이 이루어졌다. FSX는 현재 최고품인 미국의 F-15, F-16이나 구소련의 미그기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고도의 기량을 가진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일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 개발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가하게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같은 대미강경파들은 미일공동개발협정을 당장 파기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²⁵⁾

이처럼 일본은 자위대의 전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으며, 막강한 육·해·공군력을 갖추고, 태평양지역에서 미일안보체제하의 보조적 기능에서 벗어나 군사적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역내 군사대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일본은 방위전략도 점차적으로 '전수방위'에서 '지역방위'로 전환한 데 이어, 세계적 차원인 '전진방어'전략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22)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이장욱, "동북아 각국의 전력대비," 『신아세아』, 제8권, 제4호 (2001년 겨울), p. 172에서 재인용.

23) 김성철, 앞의 글, p. 12.

24) 김경민, "군사기술대국 일본," 『한국정치학회보』, 27집, 1호(1993), p. 455.

25) Shintaro Ishihara, *The Japan That Can Say No*, trnas. Frank Baldwin (New York: Simon & Schuster, 1991), pp. 45-46.

2. 외교면의 역할 증대

일본은 외교면에서의 국제공헌을 높이는 활동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라는 명분 하에서 국제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 위상이 높아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 역할을 높이려는 것이다. 걸프전에서 전비 130억 달러를 부담하고서도 서방국가들로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은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 하에서 자국의 국제적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분쟁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²⁶⁾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포함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은 1991년 12월 3일 중의원을 통과한 후, 참의원을 거쳐 92년 6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으로 최종 성립되었다.²⁷⁾ 철저한 탈군비를 표방한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해외로까지 그들의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본은 엄격한 헌법 해석에 집착하면서도 유엔헌장 제7장에 의한 평화의 강제, 즉 군사적 집단안보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파병(派兵)'으로서 헌법 9조에 위배되지만, 헌장 제6장에 입각한 평화유지활동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파견(派遣)'으로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수사학을 구사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유엔이 지닌 느슨한 국제공동체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자위대의 파견은 헌장 제2조 5항에 의한 회원국들의 협력 의무 속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1988년에 나미비아와 니카라과에 선거 감시를 위해 2명의 정무관을 파견한 것을 표시로 1991년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에 1명의 정무관을 파견함으로써 PKO에 이미 참가했던 것이다.²⁸⁾

PKO협력법은 1998년 4월 30일에 제출된 개정안이 5월 15일에 중의원을 통과함으로써 6월초에 개정되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큰 반발은 없었으며, 그 변화된 내용 중 중요한 것을 보면, 첫째 국제적인 선거감시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유엔PKO에 관계된 것만이 협력대상이었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국제적인 선거감시의 실적을 가진 지역적 기관(예를 들어 OSCE나 OAS) 등으로부터의 요청에도 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인도적인 물자협력과 관련하여 유엔산하 기구이외에도 인도적인 국제기구원활동에 종사하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요청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나 물자지원을 하도록 했다. 셋째는 무기의 사용의 경우 종래에는 자위관의 개별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전환하여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²⁹⁾ 이러한 개정 내용은 일본이 PKO활동의 범위를 넓혀 점차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민들의 PKO에 대한 인식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PKO 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26) 해외파병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Ezra P. Vogel, "Japanese-American Relations After the Cold War," *Daedalus*, Vol. 121, No. 4 (Fall 1992), pp. 35-60 참조.

27) PKO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엔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해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위 말하는 5원칙으로서 1) 정전합의, 2) 분쟁당사자의 동의, 3) 중립, 4) 독자판단에 의한 철수, 5) 대원의 생명 및 신체보호에 한정된 무기사용 그것이다. 셋째, 파견하는 자위대원의 신분은 병임으로 하고, 부대로서 참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PKF의 국회 승인론으로, 평화유지군(PKF)의 본 업무에 자위대 부대가 참가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소위 말하는 PKF동결론으로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의 참가는 별도의 법률로 정할 때까지 동결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법시행으로부터 3년 후에 실시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여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면우, "일본의 다자외교: PKO, 유엔안보리, 그리고 ARF에의 입장을 중심으로," 김성철 편, 앞의 책, p. 53.

28) 오기평, 앞의 글, p. 75 :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35號 (1991), p. 85.

29) 이면우, 앞의 글, p. 58.

보면, 1994년에 적극적인 찬성이 15.5%에서 97년에는 25.5%로 10%나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적극적인 반대는 8.6%에서 3.3%로 하락하였다. 소극적인 찬성까지 포함한 PKO참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94년의 83.9%에서 97년에는 88.4%로 증가하고 있다.³⁰⁾ 이런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들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는 헌법 제9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도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유엔의 무력행사에 자위대가 참가하더라도 이는 유엔 행동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주권 발동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헌법 제9조가 포기한 전쟁, 무력행사와는 상이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전쟁을 포기한 헌법도 전투행위를 행하는 유엔군에 부대를 파견, 참가시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해석개헌'을 주장했던 것이다. 요컨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헌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침략 목적의 무력행사이자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를 위한 무력행사는 아니라는 것이다.³¹⁾

일본은 이처럼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 파견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정당화하면서,³²⁾ 냉전 종식 후 위상이 높아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결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개입의 불확실성, 중국의 역내 군사대국화 가능성,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의 증대 등이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의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결성에 적극 나서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동시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1년 7월 일본의 나카야마 외상은 처음으로 다자간안보대화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MC)에서 경제협력문제는 물론 안보문제도 다루자는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과 7개의 대화파트너국가의 고위실무자들이 안보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였다.³³⁾ 그 당시에 이 제안은 아세안국가들로부터는 거절되었지만, 그후 1993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일본의 구상은 1992년 6월 미야자와 수상이 아태지역의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아시아판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더욱 발전되었으며, 1993년 1월 ASEAN 순방시에 '미야자와 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국가들간의 정치·안보대화의 촉진과 지역안보에 대한 장기적 비전의 개발을 주장하였으며, 아태지역 경제의 개방성 제고와 역동적 경제성장 촉진 등을 제의

30) 總理府廣報室 編, 『月刊: 世論調査, 外交』(平成 10年 5月號), p. 11.

31) 答申案, "國際社會における日本の役割(全文)," 『文藝春秋』(1992年 4月), pp. 132-145.

32) 헌법 개헌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자민당은 과거 오부치 총리가 헌법은 불변의 장전으로 일자일구도 수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광범위한 헌법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피력한 바 있으며, 공식 입장은 헌법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선이다. 자유당은 당내 대다수가 개헌에 적극적이며, 개헌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 미비를 지적하며 관련법 정비를 주장하였다. 공명당은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권 존중의 3원칙과 제9조(평화헌법)의 견지를 전제로 하여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민주당은 헌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자위대는 헌법해석상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인 바, 헌법과 법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산당과 사민당은 개헌에 반대하며, 헌법조사회 설치 표결시 반대하였다. 세종연구소, 『일본의 보수화,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 정책보고서 24호 (2000), pp. 12-13 참조.

33) Taro Nakayama, "Statement to the General Session of the 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 Kuala Lumpur, Malaysia (July 22 1991).

하였다. 또한 일본의 자민당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3국을 핵으로 하는 동북아안보기구의 설치 및 미국, 중국, 일본의 정기 정상회담 개최를 제창한 외교정책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외교지침에서 현재의 미·일 양국간 안보대화에 덧붙여 다자간안보체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중·일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회담, 그리고 한반도에 초점을 둔 동북아안보기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현재 아태지역에서 유일한 다자간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한 미일동맹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이용하는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적 팽창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패권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이러한 다자간안보체제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일본이 ARF나 아시아의 다자간안보협력기구의 결성에 적극적인 열성을 보이는 것은 자국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안보면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적 역할 증대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냉전 이후 시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 강화 추세와 함께, 안보리의 개편 추세 움직임을 예상하면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온갖 외교적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³⁵⁾ 미야자와 수상은 1992년 2월 1일 유엔에서 일본 정부의 영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970년대부터 일본은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상임이사국의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 왔는 바, 걸프전을 계기로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유엔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 유엔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아세아 지역 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치대국이 되려는 것이다.

일본은 우선 상임이사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 제53조의 '적국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1991년 9월 나카야마 일본 외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른바 같은 적국인 독일, 이탈리아에 공동보조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독일은 시기 상조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³⁶⁾ 또한 일본이 적국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엔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과 관련되어 있다. 1997년에 일본은 유엔 통상 분담금 전체의 15.65%를 분담하여 미국의 25.0%에 이어 두 번째이다. 독일 9.09%, 프랑스 6.42%, 영국 5.32%, 러시아 4.27%, 중국, 0.74%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996년의 PKO활동비도 일본은 15.49%를 분담하여 미국의 30.9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³⁷⁾ 2000년의 경우는 더욱 증가하여 일본의 유엔 분담금은 20.57%를 부담했으며, 미국은 25.0%, 독일 9.86%, 프랑스 6.55%, 영국 5.09%, 러시아 1.08%, 중국 0.995%를 부담하였다.³⁸⁾

따라서 이처럼 막대한 액수를 매년 부담하고 있는 일본이 유엔에서 적국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

34) 『동아일보』, 1997년 4월 12일

35) Yasuhiro Ueki, "Japan's UN Diplomacy: Sources of Passivism and Activism." Gerald L. Curtis(ed.),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Japan*. New York: An East Gate Book, 1993), pp. 365-367.

36) Takashi Inoguchi, "Japan's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Survival*, Vol. 34, No. 2 (Summer 1992), p. 83.

37) 일본 외무성 인터넷 사이트 www.mofa.go.jp에서 인용.

38) 外務省, 『外交青書』, 2000. The Asahi Shimbun, *Japan Almanac 2002*, p. 78에서 재인용.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적국조항 삭제 의도는 현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를 와해시켜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 9월 제53차 유엔 총회에서 오부치 전수상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가맹국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일본의 유엔 재정 부담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재정분야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요컨대, 일본이 유엔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원하는 것은 냉전 구조의 붕괴와 함께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유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것을 감안, 적극적인 유엔 공약을 통해 현실 국제정치의 결정자로서 자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협력면의 역할 증대

경제협력면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도 80년대 중반 이후에 매우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고 알려진 일본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ODA는 일본이 195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해 전후의 배상금 지불을 한 데서 유래한다. 1960년대에 ODA는 일본의 수출 증진과 원자재의 수입에 연계되고, 아시아국가들이 이 원조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일본이 아시아지역을 자국상품의 중요한 시장은 물론 원자재의 주요한 공급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77년에 14억 달러에서 1981년에 28억 달러로 ODA기금을 배가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6월 당시 일본의 다케시다 수상은 1988-93년까지 5년 동안 ODA기금으로 500억 달러를 책정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³⁹⁾ 1990년에 일본의 ODA로 공여된 자금액은 96억 6천 9백만 달러에서 1999년에는 153억 8천5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2000년의 경우 일본은 ODA기금으로 130억6천2백만 달러를 공여하여 미국의 95억8천1백만 달러와 독일의 50억3천4백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그런데 일본의 ODA기금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여에 집중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⁴¹⁾ 1990년의 경우 일본의 아세안(ASEAN)국가에 대한 ODA 지출액은 총 23억8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인도네시아 8억6천8백만 달러, 말레이시아 3억7천3백만 달러, 필리핀 6억4천8백만 달러, 태국 4억1천9백만 달러였다. 같은 해에 미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지원금은 총 3억9백만 달러였다. 인도네시아 3천1백만 달러, 말레이시아는 없으며, 필리핀 2억4천8백만 달러, 태국 3천만 달러였다.⁴²⁾ 이와 같이 일본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지원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은 필리핀에 치중되어 있으나, 일본은 모든 나라에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원조액은 3억7천3백만 달러인데 비해, 미국은 한 푼도 원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미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를 형성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1998년 10월 오부치 정권 하에서 미야자와 대장성 장관은 '신미야자와 플랜'을 발표하였다.

39) Xiaoming Zhou,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Asian Survey*, Vol. 31, No. 4 (April 1991), p. 341.

40) *Japan Almanac 2000, op. cit.*, pp. 122-123.

41) 일본은 ODA 기금 중 1980년 70.6%, 1985년 67.7%, 1990년 59.3%, 1995년 54.5%, 1999년 63.2%를 아시아국가들에 제공하였다. *Ibid.*, p. 123.

42) 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Paris: OECD, 1992).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인데, 아시아 각국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 자금지원으로 150억 달러, 이들 각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단기 자금수요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대비로 150억 달러, 합계 30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는 요사노 통산장관이 아세안 순방을 앞두고, 'ASEAN 포괄지원 프로그램'을 밝힌 바 있으며, 11월 24일 요사노 통산성 장관은 '신미야자와 플랜'과는 별도로 아시아지역의 지원책으로 5조 엔 규모의 특별 엔 차관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산성은 아시아판 뉴딜이라고 하면서 연간 1조 엔으로 5년간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을 밝혔던 것이다.⁴³⁾

그러면 왜 이처럼 일본이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해 원조와 ODA기금을 집중 공여하고 있는가? 그 첫째 이유는 일본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국내자원이 빈약하여 외국과의 무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원자재를 공급하고 투자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의 원조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즉, 일본은 피원조국들에 대해 원조기금을 일본기업의 수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중용해 왔던 것이다.⁴⁴⁾ 이를 통해 일본은 원조, 수출, 그리고 수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EU와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의 경제블록화에 대비하여 아시아에서도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을 준비하려는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무기 등장 이후 군사력은 대체성(fungibility)이 낮아, 과거보다 국가의 힘(power)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다.⁴⁵⁾ 상대적으로 경제력은 대체성이 높아, 이에 입각한 외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시혜)능력은 영향력을 높이는 데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대개도국 개발원조는 경제·정치적 발언권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상주의적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과 경제운용 능력을 활용하여 저개발국들의 경제발전, 세계 각국에서의 민주주의 증진, 인권신장, 군축, 그리고 환경보호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른바 '평화발전을 위한 엔화의 사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이런 부문의 정책 추구를 통하여 일본의 도덕적, 정치적 위신을 높여 보겠다는 실리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일본은 아태지역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체에 대해서는 EU, NAFTA의 지역주의화 추세와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일본 중심의 아시아국가들만의 EAEC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국을 의식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APEC을 선호하고 있다.⁴⁷⁾ 일본이 향후 EAEC를 강화하는 '아시아중심주

43) 이 특별 엔차관에 대해서는 대장성의 반대로 6천억 엔으로 감소하였다. 대신 별도로 도로건설이나 항만 등의 인프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0.75% 정도의 저금리로 40년 정도의 장기융자로 전환하였다. 진창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적극적 대외경제정책으로 전환," 김성철 편, 앞의 책, p. 90, 92 참조.

44)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의 대필리핀 ODA기금은 대략 1조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 기금의 80%가 엔화 차관이었으며, ODA기금의 70%를 일본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쓰여졌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일본의 수입품은 80%가 거의 원유, 목재 등의 원자재이다 Roger Bowen, "Japan's Foreign Policy,"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March 1992), pp. 70-71.

45) David A. Baldwin, "Power Analysis and World Politics: New Trends versus Old Tendencies," *World Politics*, Vol. 31, No. 2 (January 1979), pp. 163-175.

46) Shafiqu Islam(ed.), *Yen For Development: Japanese Foreign Aid and the Politics of Burden-Sharing*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1), p. 8.

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APEC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세계주의'로 나갈 것인지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 국내정치적 주도세력의 태도 변화라는 두가지 점에 달려 있다. 이 점은 후술하기로 한다.

일본은 자국의 경제대국화와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 변화에 직면하여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요컨대,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정치·군사대국의 지위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갈등관계가 노정될 것인가. 이는 일본이 어떠한 국가적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을 바꾸어 검토해 보기로 하자.

IV.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미일관계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탈냉전의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내에서는 두가지 입장이 대립하였다. 하나는 냉전 시대의 주적이었던 소련제국이 사라져버린 만큼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과 같은 개입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외문제보다 국내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고립주의적 사조였다.⁴⁸⁾ 다른 하나는 냉전 시대는 물론 탈냉전시대에도 미국은 세계적 지도력을 더욱 행사해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세계적 지도력은 더욱 확대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다.⁴⁹⁾

탈냉전기에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이 두 주장의 어느 하나를 취하지 않고 두가지를 모두 취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이상주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고립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계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전략(Global engagement)을 추구했던 것이다. 다만 개입의 방법이 냉전시대처럼 전세계적인 봉쇄(Global containment)가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합의와 유엔의 집단안보에 더 비중을 두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대외정책의 주요 원칙으로서 세 가지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안보 강화, 미국경제 번영의 촉진, 그리고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이다.⁵⁰⁾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서도 궁극적인 안보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이후시기의 국가안보전략으로서 '개입과 확장(Engagement and Enlargement)전략'을 천명하였다.⁵¹⁾ 여기에서는 위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하나

47) David P. Rapkin. "Leadership and Cooperative Institutions in the Asia-Pacific."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p. 119-122.

48) 대표적인 주장은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7) 참조.

49) 대표적인 주장은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Inc., 1990) ; Zbigniew K. Brzezinski, *Out of Control: Global Turmoil on the E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cribner, 1993) 참조.

50)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의 세가지 목표를 to enhance America's security, to bolster America's economic prosperity and to promote democracy and human rights abroad 에 두고 있다.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New Century* (December 1999), Preface 참조.

51)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n-Pacific Region* (February 1995), pp. 1-7.

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갖춘 하나의 공동체 실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대외정책의 세가지 원칙 중 하나로 채택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불황에 허덕여 온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정자와 무역적자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80년대에 미국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은 그야말로 엄청난 무역흑자를 누리면서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금방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경제면에서 기세를 휘둘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간의 무역마찰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으며,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에 대해 양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양국간의 무역마찰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질론을 주장하는 '수정주의자'(Revisionists)들이 미국내에 하나의 학파를 구성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진 '일본때리기'(Japan-bashing)집단으로 등장하게 된다.⁵²⁾ 이들의 주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의 대일 무역역조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미국내 여론의 지지도 상당했다. 그리고 이들은 미일안보체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통주의적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다. 예컨대, 찰머스 존슨은 탈냉전의 등장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고, 오히려 미군의 지속적인 개입이 전략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의 동맹국이 안보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미국만이 자신의 자원을 낭비할 수 없다는 신고립주의적 주장을 했던 것이다.⁵³⁾ 특히, 냉전 종식과 더불어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마당에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 일본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국제적 역할이 증대될수록 미국과의 안보관계도 새로운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걸프전쟁시에 일본은 돈만 내고 한 방울의 피를 흘리려 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수정주의자들은 보았다.⁵⁴⁾ 따라서 일본은 진정한 동맹국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냉전 종식 이후에 더 이상 동맹의 의미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미일안보조약을 대칭적인 관계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일의 공동적 안보이익이 과장되어 왔으며, 미일안보조약은 일본 경쟁력을 위한 사실상의 보조금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미일관계가 비록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제력이 도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포괄적인 위협은 소련이나 다른 이념체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냉전 종식 후에도 미국이 국제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내의 주류파들은 미국의

52)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이 등장한 이유는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이기는 하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는 상이한 발전지향형의 신중상주의적 자본주의체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데 기인한다. 대표적인 수정주의자들로서는 존슨(Chalmers Johnson)을 비롯하여, 초아트(Pat Choate), 프레스토비츠(Clyde Prestowitz), 펠로우스(James Fallows) 등 학자, 전직 관료, 기업가, 정치인들이 포함된다. 이들의 입장은 전후 일본의 불공정한 모든 경제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왔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공정한 국제경쟁이 가능한 '공평한 게임의 장'(a level playing field)을 만들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과지향적인 '관리무역'(managed trade)을 시행하여 미국의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David Brock, "The Theory and Practice of Japan-Bashing,"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89), p. 31.

53) Chalmers Johnson and B. E. Keehn,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pp. 103-114.

54) Edward Olson, "Target Japan as America's Economic Foe," *Orbis* (Fall 1992), pp. 495-497 : 이하 자세한 논의는 강근형, "일본의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이상우 편, 앞의 책, pp. 703-709 참조.

거시적 이익은 일본을 적으로 돌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협력을 촉진시키는 국제체도의 망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일본의 대국화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⁵⁵⁾ 그러나 안보무임승차로 경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 미국을 경제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일본을 더 이상 방위할 필요가 없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주장이 일부 지도층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몹시 팽배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일본 내에서도 냉전 종식을 맞아 일본의 안보적인 역할이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1992년 일본의 '방위백서'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강조하고, 냉전이후의 시대에 세계군사질서가 근본적인 구조적 변혁을 맞고 있어 일본의 새로운 안보 역할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아시아판 집단안보체제의 구축과 유엔평화군에의 자위대 참여 등에서 일본의 역할을 적극 모색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즉, 일본은 자신의 역할을 경제적이고 평화적인 데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꾸준히 자위대의 전력을 강화시키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에 대비하고 있다.

후나바시(船橋洋一)는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미일관계를 형성해 온 범세계적인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양국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양자관계를 재정의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히 안보적 측면의 범세계적 동반자(global partner)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⁵⁷⁾ 첫째는 미일안보조약의 비대칭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미일안보조약의 기초가 된 전략적 기반이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아시아의 안정 유지로 변화하게 된다면, 미·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미일양국이 진정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이룩해 가기 위해서는 군사적 역할면에서도 동등한 위치가 필요하고,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이 극동지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역할 강화는 일본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확대되어 갈수록 불가피하게 대두될 문제이다.

오늘날 일본 내에서는 아시아인들의 대일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처하며, 북한의 모험주의를 고려하여 미군이 계속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지도층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의 개입이 동아시아의 안보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긴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양자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것이 앞장에서 논술한 바 있는 1997년에 합의된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군의 주둔을 계속하면서도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1997년 6월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한 '미일방위협력지침 중간 보고서'를 확정했으며, 9월에는 미·일간의 '신방위협력지침'을 작성, 발표하였다.⁵⁸⁾ 여기에서 '일본 주변

55) 나이의 이니시어터브가 대표적인 주장이며,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의 축을 형성했다.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pp. 90-102. 이외에도 Kenneth Dam, John Deutch, Joseph S. Nye Jr., and David M. Rowe, "Harnessing Japan: A U.S. Strategy for Managing Japan's Rise as a Global Power,"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6, No. 2 (Spring 1993), pp. 29-42 ; Howard H. Baker, Jr. and Ellen L. Frost, "Eescuing the U.S.-Japan Alliance,"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pp. 97-113 참조.

56) 日本防衛廳, 『防衛白書』(1992).

57) Yoichi Funabashi, "Japan and America: Global Partners," *Foreign Policy*, No. 86 (Spring 1992), pp. 31-32.

유사시' 미일간의 안보협력 내용을 40개 항목에 걸쳐 구체화시켰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일본의 주변지역 사태시의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주변지역은 결국 한반도의 유사시를 겨냥한 것이며, 미국측은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일본 주변지역 사태시의 주요 협력 내용은 적성국가 선박의 검문, 기뢰소해함정의 파견, 비전투원의 대피 및 구조 활동, 미군에 대한 물자 연료공급 수송 및 민간 공항 항만시설 제공, 그리고 미군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등 광범위하다. 요컨대,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주일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공해상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일본이 자국안보의 틀을 벗어나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미일안보조약에 있어서 군사협력의 범위는 극동(필리핀 해역 이북)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난해 미일안보공동선언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중대가 점차 제도화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어서 신방위협력지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목적으로 관련법안을 마련하여 1999년 5월 24일 참의원에서 가결함으로써 미국의 지역분쟁에 대한 증원 기반을 구체화시켰으며, 지역안보 문제에 일본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관련법안은 物品役務相互提供(ACSA)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주변사태법안 등 세가지 법으로 일본의 대미군지원이 요구되는 주변사태 활동을 합법화하는 법들이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동북아정책인 '개입과 확장전략'⁵⁸⁾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신방위협력지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책임 분담을 통하여 일본의 역할 증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면, 안보비용을 경감하면서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안보면에서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미일안보체제하에서 정치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대한도의 정치적 역할 증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이 미일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자국의 역할 증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일안보협력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자위대의 행동 반경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미국이 영원히 일본의 보호자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자국의 안보적 역할을 적극화하려는 데 기인한다. 설사 미국의 안보 우산이 지속된다 해도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일본은 자국의 안보적인 역할을 모색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앞으로 상당기간 주둔 하더라도 그 역할과 비용분담 문제는 미일안보관계의 주요 갈등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1995년 9월에 발생한 오키나와 성추행 사건으로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58)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의 전문 번역본은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4권, 1호(1998), 부록 참조.

59) 여기에서 미국은 예견할 수 있는 장애에 현재의 10만명 병력을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Department of Defense, *op.cit.*) 그리고 이를 입안한 조셉 나이 전국방차관보는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은 이 지역 전체에 대해 깊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의 이 지역에의 주둔은 동아시아 안보 균형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며, 미국이 이 지역에 개입함으로써 안정을 다지고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낮추며 패권세력의 등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oseph S. Nye, Jr., "U.S. must engage Asia in maintaining security and prosperity," prepared statement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June 27, 1995).

있고, 미래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최첨단 기술 경쟁이 미·일간에 본격화되고 있어 새로운 변혁기에 접어든 미일안보관계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일본과 유사한 '산업정책'과 무역에서의 '관리무역' 등을 강력히 구사함으로써 일본과의 경제마찰은 매우 고조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미국의 경제는 점차 불황을 극복하여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다시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반면에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버블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장기적인 경제침체기에 들어서게 된다.⁶⁰⁾ 미국은 자국의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의 수입개방이나 구조개혁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요구는 일본국민들에게 지나친 것으로 비쳐졌으며, 반미감정 또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클린턴 행정부는 동아시아정책에 있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보고, 중국 증시정책을 노골화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불만 또한 큰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일양국간에 수면 하에서 불만감이 드리우게 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최소한 군사적인 유일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패권국가의 위치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대국화하려는 일본의 미래를 향한 야심이 서서히 양국간에 경쟁 내지는 갈등관계를 노정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국가적 진로를 선택해 갈 것인가? 이는 국제정치의 구조와 그것에 대한 일본 내 정치엘리트들의 태도에 따라 형성되어질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향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경제대국 일본이 나아가야 될 진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서 파악하고 있다.⁶¹⁾

첫째는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외교)대국·군사대국이 되는 길이다. 이는 전통적인 패권국가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며, 미일관계가 악화될수록 이러한 독자적인 대국에로의 움직임은 그 설득력이 강해질 것이다. 이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의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주장에 가까우며,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비롯한 자민당의 강경파와 신보수주의자들 내의 극우강경파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과거의 '아시아주의'에 향수를 갖고 있고,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일본을 지향하며, '재아시아화(re-Asianization)'⁶²⁾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외교)대국을 추구하는 길이다. 패권국가의 논리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위의 주장과 유사하나, 패권국가로서는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하에서 일본은 미국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을 경제적·정치외교적·군사적으로 보완하는 점에서 일본의 국제공헌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즉, 국제공헌을 대미공헌과 동일시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60) 일본의 경제불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모리시마 미치오, 장달중 역역,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서울: 일조각, 1999) : 아사이 다카시, 신장철 역, 『2003년 일본국 파산』(서울: 사람과 책, 2001) 참조.

61) 이하의 논의는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現代日本社會: 7 國際化』(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3), pp. 371-382. 강근형, "일본의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이상우 편저, 앞의 책, pp. 709-711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일본의 진로를 예측하는 분석으로는 Takashi Inoguc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Vol. 65, No. 1 (Winter 1988/1989) : Joseph S. Nye Jr.,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No. 89 (Winter 1992/93) : Chalmers Johnson, "Japan in Search of a "Normal" Role," *Daedalus*, Vol. 121, No. 4 (Fall 1992), pp. 1-33 참조.

62) '재아시아화'란 과거의 동아시아공영권과 유사하게 일본이 아시아에서 대국을 지향하여 미국과 유럽과 대등한 힘을 구사하는 구상을 의미한다. 일본의 '재아시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Victor J. Koschmann, "Asianism's Ambivalent Legacy," Peter Katzenstein and Shiraishi Takashi(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83-110 참조.

미국의 힘이 약해진 만큼 일본의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제약하는 장해는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민당 주류의 견해와 가깝고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도 아직까지는 이와 유사하다. 또 신보수주의자들 중의 온건파의 견해와도 비슷하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이는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던 '팍스 아메리카나'를 일본의 힘으로 재구축하려는 노선이라 할 수 있겠다. 미·일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더 나아가서는 '양자혜게모니'(Bigemony)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경제대국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평화국가' 혹은 '비무장중립화'의 노선이다. 즉, 패권국가의 논리를 부정한 위에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반핵군축외교·경제협력 등 오로지 비군사면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 일본의 국제공헌의 목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당 및 공산당의 견해에 가깝고, 또한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를 지지하는 무당파층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노선이다. 세번째의 방향은 냉전의 종식으로 미·소대립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미·소양국 사이에서 중립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을 상실한 듯하다.⁶³⁾ 다만 평화주의는 반핵군축외교, 경제협력 등 비군사적인 면의 국제공헌의 목적을 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일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대체적으로 첫번째와 두번째 방향 중의 어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군사대국화까지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외교)대국화까지만 나갈 것인가 하는 점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의 국제정치의 구조(강대국간의 힘의 배분상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될 것인가와 일본 내에 어떠한 정치세력이 주도해 갈 것인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형성될 국제정치의 구조는 소련의 변화로 인한 냉전 종식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패권적 힘의 향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패권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21세기에도 다시 한번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됨을 의미하며, 미국 중심의 일극구조가 지속되고 패권안정이론가들의 주장처럼, 미국패권체제 하에서의 안정된 질서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의 일본의 향방은 앞에서 지적한 두번째의 노선인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 패권의 보조자로서 미일안보조약의 토대하에서 아시아에서의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면에서도 현존하는 '아태경제협력회의'(APEC)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조 속에서 일본이 보조적 역할을 추구해가는 '태평양 세계주의'(Pacific globalism)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즉,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구미협조적인 국제주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을 자국의 패권적 지도력을 보조하는 한계 내에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입 등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문제에 있어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지 않고 미국의 패권적 힘이 쇠퇴할 경우에는, 국제정치의 구조는 세력균형체제로 변화될

63) '비무장중립·평화주의'의 노선은 이상주의적인 대안으로 현실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4월의 『요미우리』(讀賣)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찬성률이 50.4%를 보였고, 반대율은 역대 최저인 30.9%로 나타났다. 이는 찬성률이 94년의 44.2에 비해 6.2%나 증가한 것이다. 반대율은 94년의 40.0%에 비해 9.1%가 하락했다. 개헌을 지지하는 이유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국제공헌을 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비율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86년에는 22.6%만이 개헌에 찬성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95년의 50.4%로의 상승은 일본의 여론이 점차 헌법을 개정하여 국제공헌에 적극 나서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讀賣新聞』, 1995년 4월 6일.

것이다. 즉,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등 5대 세력이 경쟁하는 다극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⁶⁴⁾ 이 경우의 국제질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다두정치하에서 공동으로 패권을 행사하는 '팍스 콘소시아'(Pax Consortia)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양상이 전개될 경우 일본은 첫번째의 방향으로 국가 진로를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 더 나아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대국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⁶⁵⁾ 미일안보조약이 해체되고 주일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일본은 독자적인 거부능력을 갖는 현재의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의 핵군사력을 보유한 군사강대국으로 등장함으로써 하나의 극을 형성하려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군비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으며, 지역군사대국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 가능한 군사능력을 갖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도 동남아시아를 배후지로 삼는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배제하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를 적극 추진하고 거기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추구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이 배타적으로 될 것인가의 정도에 부분적으로는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즉, 미국과 EU가 '배타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일본도 이에 맞서 EAEC 중심의 '재아시아화'를 강화하는 '아시아주의' 방향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일본이 미국 패권에 도전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 정치의 주도세력이 어떤 세력이 될 것인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첫번째의 방향을 강조하는 극우적인 강경파가 주도하게 된다면 미국 패권에 도전하여 일본 중심의 '팍스 니포니카'(Pax Nipponica)를 지향하고 '아시아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반면에 두번째의 방향을 강조하는 온건파가 계속 주도하게 된다면 미국 패권의 약화를 보완하면서 '팍스 콘소시아'에 만족할 것이다. 비록 이들은 미국과의 '양자해게모니'를 구축하려 할 것이나, 이는 미국, 유럽 및 중국 등의 반대로 그 실현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이 주도하는 '팍스 니포니카'는 출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등이 그것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한다 해도 영토가 좁기 때문에 충분한 제2타격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여타 국가들로부터 패권의 정당성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지도자들이 국내문제나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면에서 일본은 한계가 있다.

64) 키신저도 21세기의 국제체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여섯개의 강대국으로 구성된 18세기의 유럽의 국가체제와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pp. 23-27.

65) 케네스 월츠는自助를 원리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는 세력균형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므로 일본은 경제대국에 걸맞는 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Kenneth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pp. 44-79.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일본은 국내적인 구조와 규범 등의 제약으로 인해 군사대국이 힘들다는 분석은 Peter J. Katzenstein and Nobuo Okawara, "Japan's National Security: Structures, Norms, and Polic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Spring 1993), pp. 844-118 참조.

66) 이와는 반대로 경제면에서 기능적 형태의 일본의 우위에 기초한 '팍스 니포니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Richard Leaver, "Restructuring in the Global Economy: From Pax Americana to Pax Nipponica?," *Alternative* 14, (1989), pp. 429-462 참조.

한편, 클린턴 행정부가 아시아정책에 있어 중국을 중시해온 데 반해,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잠재적인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미 대통령 선거시 정책 강령에서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열쇠를 쥐고 있는 파트너이며, 미일동맹은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⁶⁷⁾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강화 현상은 미국이 세계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상과 이의 일환인 아시아에서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추진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전략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으로서도 보통국가화나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와 이를 통한 안보면의 역할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일동맹은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앞에서 서술한 바의 두 번째 일본의 진로인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을 미국은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는 경제면의 역할 분담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아시아에서는 지역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일본의 역할 증대를 통해 견제하려는 정책을 구사하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미일동맹이라는 우산 속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대국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통국가화와 더 나아가서는 지역패권을 겨냥한 군사대국화의 기반을 서서히 구축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신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일관계의 변화를 설명해 보았다. 냉전 종식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역할 증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과의 새로운 관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점고된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정치적·군사적 이유로 경제적인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약화되었다는 점과 일본의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무역 마찰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관계를 둘러싼 양국관계는 갈등이 노정될 것이다. 안보면에서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주둔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초석이라는 점과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미일동맹관계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일본도 당장은 미일안보조약이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주변 아시아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점에서 동조약의 유지에 찬성하고 있는 듯하다. 미군이 앞으로 상당기간 주둔 하더라도 그 역할과 비용분담 문제는 미일안보관계의 주요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장기적인 면에서 경제관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정된다면 미국내의 여론도 일본의 안보를 미국이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일본측에서도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분출하여 일본의 독자적 행보(재무장)를 가로막는 것이 주일미군을 포함한 미일안보조약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든 동 조약을 변경시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미일안보조약 하에서도 ‘미일신방위협력지침’에 천명된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은

67)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pp. 45-62 참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는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의 하나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대다수의 국가들이 군사비를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중국은 1999년 126억 달러, 2000년 145억 달러, 2001년 170억 달러로 꾸준히 군사비를 대폭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PKO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비난한 바 있으며,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아시아의 중심으로 자처하고 있는 중국은 동아시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간주해 오고 있는데, 이는 특히 동남아시아를 엔 블록화 하려는 일본의 야심과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리고 남지나해에서 중국과 아세안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왔는 바, 석유 수입을 위한 해상수송로(sea lane) 확보에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에서도 방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더욱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러시아가 점차 아시아로부터 발을 빼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아시아에서 패권을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불확실해질수록 그 가능성은 더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면의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로서의 역할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안전판이 된다. 이러한 지도력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행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관계를 둘러싸고 미국의 대일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신보주의세력의 극우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주의'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1930년대에 세계경제의 위기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구미제국이 압박해 오며 따라 '아시아주의'가 '대동아공영권'을 표방하여 서구에 반격을 들었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다. 오늘의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이것의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악의적인 중상주의정책에 기인한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일본 내에서의 '아시아주의'는 점차 더욱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도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질 것이므로, 이것의 향방도 미국의 호의적인 패권적 지도력이 동아시아에서 지속될 수 있는나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냉전 종식이후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의 힘과 영향력이 그 전보다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태평양전쟁을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성전이었다고 미화하고, 과거의 식민통치에 대해 만족할 만한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이 정치·경제·군사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물론 주변국가들에게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위협이 약하고 경제문제에 더 치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장기적으로도 안전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은 다음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세계적 평화 유지와 경제발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세계적 지도국가의 지위를 가장 잘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주변국가들로부터의 의구심과 두려움이 커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중국연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미일군사동맹을 활용함으로써 일본은 국제적이고 제도적 협력을 진흥하는 대국으로서의 세계적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은 지역적인 군사대국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써만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일본의 역할 증대에 대처하고,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새로운 '미일신방위협력지침'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한일 양국간에 분명한 사전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한일 양국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본의 역할에 일정한 제한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신속히 협조할 수 있는 협력체제도 미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상기한 바 있는 일본의 안보면의 역할 증대가 증일간 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긴밀한 외교적 노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 중, 일 지식인들 및 NGO들간에 밀접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東北아시아知識人連帶' 내지는 '東北亞NGO連帶'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들 연대들은 일본과 중국이 패권경쟁 내지는 군사적인 마찰을 피하도록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아시아인들의 양심을 대변하는 민간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의 지식인이나 NGO, 더 나아가서 한국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증일간 패권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장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도 안보문제에 대한 제도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즉, 아시아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국가 등이 참여하는 '집단안전보장기구'를 결성해야 한다. 한국은 모든 외교적 채널을 이용하여 이의 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전 단계로 현재 아세안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을 활성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는 '협력안보'의 테두리 하에서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와 같은 안보레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성된다면 국가간의 상호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역내국간의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결성을 위해 한국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제안하거나 의제를 설정하는 등의 지적인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근형. "일본의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Ⅱ』. 서울: 오름, 1998.
- _____.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신아세아』, 제8권, 제4호(2001년 겨울).
- 김정민. "군사기술대국 일본." 『한국정치학회보』, 27집, 1호 (1993).
- 김성철.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적극적 외교." 김성철 편. 『일본의 외교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2000. 『동아일보』, 1997년 4월 12일.
- 모리시마 미치오, 장달중 외역.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서울: 일조각, 1999.
- 신장철 역. 『2003년 일본국 파산』. 서울: 사람과 책, 2001.
- 오기평. "신국제질서와 일본의 역할." 『일본평론』, 7집 (1993년 봄·여름).
- 이갑윤. "일본의 정당과 선거." 최상용 외. 『일본·일본학: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오름, 1994.
- 이면우. "일본의 다자외교: PKO, 유엔안보리, 그리고 ARF에의 입장을 중심으로." 김성철 편. 『일본의 외교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이상우. "21세기 신아시아 질서와 일본의 역할."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Ⅱ』. 서울: 오름, 1998.
- 이장욱. "동북아 각국의 전력대비." 『신아세아』, 제8권, 제4호 (2001년 겨울).
-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4권, 1호 (1998).
- 세종연구소. 『일본의 보수화, 군사력 강화와 헌법개정』. 정책보고서 24호 (2000).
- 진창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김성철 편. 『일본의 외교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차기벽. "21세기 일본의 위상—정치이념—." 현대일본연구회 편. 『21세기 일본의 위상』. 서울: 법문사, 1993.
- 헌팅턴, 새뮤얼. 소순창·김찬동 옮김.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 서울: 김영사, 2001.
- Baker, Howard H., Jr. and Frost, Ellen L. "Rescuing the U.S.-Japan Alliance."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 Baldwin, David A. "Power Analysis and World Politics: New Trends versus Old Tendencies." *World Politics* Vol. 31, No. 2 (January 1979).
- Bowen, Roger. "Japan's Foreign Policy." *Political Science & Politics* (March 1992).
- Brock, David. "The Theory and Practice of Japan-Bashing."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89).
- Brzezinski, Zbigniew K. *Out of Control: Global Turmoil on the E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cribner, 1993.
- Dam, Kenneth, Deutch, John, Nye, Joseph S. Jr. and Rowe, David M. "Harnessing Japan: A U.S. Strategy for Managing Japan's Rise as a Global Power."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6, No. 2 (Spring 1993).
-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 Drifte, Reinhard. *Japan's Foreign Policy*.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0.
- Funabashi, Yoichi. "Japan and America: Global Partners." *Foreign Policy*, No. 86 (Spring 1992).
- 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Survival*, Vol. 33, No.1 (January/

February 1991).

_____ .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_____ . "The Lonely Superpower: The New Dimension of 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1999).

IISS. *Military Balance 2000/0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IISS. *Military Balance 2001/0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Inoguchi, Takas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Vol. 65, No. 1 (Winter 1988-89).

_____ . "Japan's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Survival*, Vol. 34, No. 2 (Summer 1992)

Ishihara, Shintaro. *The Japan That Can Say No*. trans. Frank Baldwin. New York: Simon & Schuster, 1991.

Islam, Shafiqul(ed.). *Yen For Development: Japanese Foreign Aid and the Politics of Burden-Sharing*.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1.

Japan Almanac 2002. Tokyo: The Asahi Shimbun, 2001.

Johnson, Chalmers. "Japan in Search of a "Normal" Role." *Daedalus*, Vol. 121, No. 4 (Fall 1992).

Johnson, Chalmers and Keehn, B. E.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Katzenstein, Peter J., and Okawara, Nobuo. "Japan's National Security: Structures, Norms, and Polic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Spring 1993).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7.

Kissinger, Henry.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Koschmann, Victor J. "Asianism's Ambivalent Legacy." Peter Katzenstein and Shiraishi Taka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Leaver, Richard. "Restructuring in the Global Economy: From Pax Americana to Pax Nipponica?." *Alternative*, Vol. 14 (1989).

Muramatsu, Michio, and Krauss, Ellis S. "The Conservative Policy Line and the Development of Patterned Pluralism." Kozo Yamamura and Yasukichi Yasuba(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The Domestic Transformatio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Nye, Joseph S.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Inc., 1990.

_____ .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_____ .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No. 89 (Winter 1992/93).

_____ . "U.S. must engage Asia in maintaining security and prosperity." prepared statement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June 27, 1995).

_____.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Paris: OECD, 1992.

Olson, Edward. "Target Japan as America's Economic Foe." *Orbis* (Fall 1992).

Rapkin, David P. "Leadership and Cooperative Institutions in the Asia-Pacific."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5.

Rice, Condo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Schoppa, Leonard J. *Bargaining with Japan: What American Pressure Can and Cannot D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Taro, Nakayama. "Statement to the General Session of the 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 Kuala Lumpur, Malaysia (July 22 1991).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New Century* (December 1999).

Ueki, Yasuhiro. "Japan's UN Diplomacy: Sources of Passivism and Activism." Gerald L. Curtis(ed.).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Japan*. New York: An East Gate Book, 1993.

Vogel, Ezra F. "Japanese-American Relations After the Cold War." *Daedalus*. Vol. 121, No. 4 (Fall 1992).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_____.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Zhou, Xiaoming.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Asian Survey*. Vol. 31, No. 4 (April 1991).

答申案. "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役割(全文)." 『文藝春秋』(1992年 4月).

大嶽秀夫. "中曽根政治のイデオロギ-とその国内政治的背景." 『レウァイアサン: 特輯: 新保守主義の擡頭』, 1號(1987年 秋).

『讀賣新聞』, 1995年 4月 6日.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現代日本社會: 7 國際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3.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日本防衛廳. 『防衛白書』, 1992.

日本防衛廳. 『防衛白書』, 平成6年版, 1994.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1991.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2000.

日本銀行. 『國際比較統計 2000』

總理府廣報室 編. 『月刊: 世論調査, 外交』, (平成 10年 5月號).